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전조 아니다”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수반 성공 비용 ‘마찰음’ 위기신호 오독 때 혼란 발생 부동산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 공급정책 병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다. 정치권은 대통령 핵심 참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 방향을 연이어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쭉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을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치가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명목 성장률 상승,

자산 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려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풀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금년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해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2천600조원으로 2배가 됐고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실장은 “금리 흐름 역시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고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기준 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고금리를 방지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 과를 졸업한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기회를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 찬반 논쟁을 주도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전북 찾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들이 25일 전북 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진영 결집’에 총력

‘사이 지지층 투표장으로’ 안간힘 민주당, 스타벅스·일베 겨냥 공세 국힘, 스벅 맞대응·공소취소 부각

했고,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 즉 정당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즉정가나 스타벅스나,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를 띄우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통한 막판 세 대결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참석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추도식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경기 광복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는 추도식에서 경쟁 상대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서로가 민주 진영의 ‘적자’임을 내세우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세 요청이 충청과 영남권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쇄도하고 있다. 전통 지지층마저 당에 실망하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박 전 대통령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막판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탄핵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후 대전·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홍 충남지사 후보를 각각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야의 행보가 격전지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광주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72%로 ‘급감’

전남은 86.5% 전국 상위권 유지 김문수 “정부가 시스템 마련해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회) 실시율이 2024년 증가 후 2025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실시율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반면, 전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5년 72.52%를 기록했다. 광주는 2023년 88.51%에서 2024년 초·중·고 모든 학교급이 참여해 100%의 실시율을 달성했으나, 불과 1년 만에 27%p 이상 급감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초등학교 실시율이 62.3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지역은 안정적인 실시율을 유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남의 전체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4.84%, 2024년 85.61%에 이어 2025년 88.50%로 매년 소폭 상승했다. 이는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세종(88.89%)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98.04%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고등학교 86.71%, 초등학교 79.4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63.3%에서 2024년 68.48%로 올랐다가 2025년 62.24%로 다시 하락하며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시율이 높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종합 지원행정, 법령 정비, 악성 민원 대처 등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소중한 추억을 누구나 공감하는 만큼 학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